

## 외국사와의 관계규명과 비교를 통한 한국사 이해의 심화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 I. 머리말

그동안 한국의 역사학계는 대별해서 한국사, 동양사 그리고 서양사라는 지리·문화적 지역에 기반한 구분으로 역사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는 역사의 내용이 방대하고 그 의미가 심대한 측면에 비추어 분업을 통해 역사의 연구와 교육의 깊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뜻에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분업화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면서 일면 각 부문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또한 지적되어 왔다. 이는 분업 후의 협업이 그리고 협업후의 분업이, 즉 분업과 협업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국제한국사학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고 역사학의 변증법적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훌륭한 장이라 생각된다.

외국사와의 관계규명 및 비교를 통한 한국사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파악은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가 세계사의 일부로서 세계사와 전체적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와 외국사의 유기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한 변증법적인 통합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 외국인이 한국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그의 시각에서 수행한 것이고 그의 시각은 그의 문화권을 반영하는 측면이 클 수 있다. 이는 두 문화권의 만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료들에 기반해서 한국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이해 차이를 (cross-cultural understanding)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 전문가와 외국사 연구자들이 관계와 비교라는 화두를 가지고 함께 학문 수행을 하는 것은 또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발표에서 필자는 외국사와의 관계규명과 비교를 통해 한국사 이해를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는지를 예시해 보고자 한다. 3가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하며 그 첫째가 제 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한국과 독일 (특히 남한과 서독)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승공체제'의 특징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로 1969-1974 년의 기간에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서독의 눈에 비친 한국의 남북관계 및 남한·서독 관계의 진전을 조명하고자 한다.

남한과 서독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주한 서독 대사관의 기록들이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을 파악하는 한 방법으로서 주한 외국 대사관들의 한국에 관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세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초국가주의에 기초한 유럽통합의 사상과 역사와 비교적 관점에

서 바라봄으로써 기존과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렇게 할 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초국가주의 사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제시될 수 있다.

## II. 외국사와의 관계규명과 비교를 통한 한국사 이해의 심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례들

### 사례 1

#### 한독관계를 통해 본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승공체제’<sup>2)</sup>

필자는 남한과 서독의 관계규명을 통해 박정희 시대 근대화프로젝트가 서독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서독의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명하고 자 한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어떠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서독의 모델에 의거하여 이루어 졌으며 한국의 산업화에 서독의 어떠한 영향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박정희 시대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일조하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소위 ‘승공체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규명 작업은 차후 소위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비교 연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사회 발전 지향점으로서의 서독 모델 / 서독의 국민성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개혁

\* 박정희의 1962년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발췌.

"그들은 먹을 것을 참았고, 입을 것을 아꼈으며, 쓸 것을 모아 살았다. 내뺏히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개인생활에 철저한 것이었다. .... 또한 독일 민족처럼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하며, 직업을 신성시 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다.... "3)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나 숙련공으로 만들었던 것이다."4)

"이러한 국가관이나 사회의 윤리, 또는 그러한 철학은 벌써부터 유전되어오는 게르만 민족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으로 명석한 ‘분별 있는 민족성’ 이다"5)

독일 방문 후에도 독일의 국민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1962년의 관점을 확인했다. "독일의 국민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근면하고 검소하고 또한 질서를 존중하며 단결심이 강

1) 한국사의 이해가 이루어질 때 국제한국사의 한 방법이 개척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에 있어서 기록관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서 외국의 기록보존소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한국사를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때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한국사 기록들이 이 나라의 이 기록보존소에 보존되게 되었는지도 규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2) 본 사례연구는 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다.

3) 국가와 혁명과 나, S. 217-8

4) 국가와 혁명과 나, S. 219.

5) 국가와 혁명과 나, S. 218.

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은 또한 이론적이고 사색적이며 철학적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다.“6)

\* 1964년 박대통령의 서독 방문 시 통역이었고 대통령 경제자문이었던 백영훈 박사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독일에서 히틀러 시기에 전개되었던 Neue Gemeinschaftsbewegung 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증언.

김포공항 도착설명에서 박대통령은: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건설의 교훈을 본받아 실천에 옮기고 모든 종래의 수원체제를 개혁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경제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겠 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국회의 협조를 얻어 국제협력에 치중한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이 며, 한편 국민 각자의 각성과 자기개혁을 강조할 것입니다.”7) 백영훈 박사는 여기에서 “국민 각자의 각성과 자기 개혁은 앞으로 전개할 새마을 운동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이라 고 설명한다. “대통령의 근검정신은 새마을 운동을 주축으로 하여, 조국 근대화를 구현하는 데 아낌없이 발휘되었다.”8)

귀국 후 방문기에서 박대통령은: “특히 독일의 농촌은 중소기업과 농촌과를 유기적으로 연 결을 맺게 하여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하겠다. 농촌과 공업이 상호의존해서 병행하여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방할 좋은 점이라고 하 겠다. 독일농촌의 어디를 가나 삼림이 울창하고 그들 국민들이 나무를 애호하는 정신을 엿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부럽게 느낀 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9)

## 2) 분단된 한국 리더십을 위한 모델로서 서독의 아테나위와 ‘승공통일’ 정책

1962년 저작 (국가와 혁명과 나)

경제발전을 통한 승공:

“아테나위 수상이나, 그의 각료들은 전후 세계가 점차 공산주의에 기울어 가자, 실속없는 반공의 구호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경제안정을 강구하였다. 이들은 실로 방공 이란 표어를 실리적인 조국 재건에 천재적인 수완으로 발휘하였다. 그같은 전후의 난국에서도 독일에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다.”

“허술한 반공의 기치나 구호는 이미 한물갔다. 승공의 첩경은 ‘피와 땀과 눈물’로만 자라는 ‘경제의 재건’, 이 하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 전에 이미 아테나위가 제시한 산 증거가 아닌가.”10)

백영훈 박사가 기억하는 에르하르트 의 충고: “통일엔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경제를 일으켜 민생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지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민주체제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

6) 부정7만리, S. 13.

7) 부정7만리, S. 133.

8)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S. 83.

9) 부정7만리, S. 13.

10) 국가와 혁명과 나, S. 233.

소 반공도 가능하고 통일도 다가오게 됩니다. 힘에 의한 통일은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sup>11)</sup>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다면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근면성으로 따져봐도 우리 국민이 오히려 독일 국민보다 부지런하면 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간산업과 리더십인데 도로와 제철소야 돈을 빌려다 세우면 될 터이고, 리더십이야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게 아닌가..."<sup>12)</sup>

### 3) 승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협력을 통한 승공

“양국간은 이렇게 강(江)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자유 태평양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아시아 10억의 유색 인종의 명목을 위한 공동 관심으로서도, 피차에 등을 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다. 유럽 공동시장(共同市場:EEC)을 통한 자유통역의 통합운동, 중근동(中近東)의 카사블랑카 헌장하의 아프리카 단결, 아랍세계의 통합운동, 그리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탄생 등, 이러한 세계의 조직 개혁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대로 고립이나 대립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흔히, 한·일 양국 관계가 흡사 지난날의 독·불을 닮았다 하는 이가 있으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성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3)</sup>

박대통령 서독 방문시 에르하르트 수상이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 조언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어나기 위해선 먼 곳에 있는 독일과의 유대관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독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영(英)·불(佛)과 숙적관계이며 2차대전 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sup>14)</sup>

이 관점은 방독 그 다음 해인 1965년에 발간된 방독기에서도 확인된다. 에에르하르트 수상은.....나토와 독일, 한국과 동아시아 협력기구 필요성을 강조<sup>15)</sup>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니, 한·일협상은 아시아의 장래를 위해서도 조속한 타결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유럽이 나토(NATO)를 통하여 공산주의 위협을 극복했듯이 아시아도 이와 비슷한 기구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여 자유우방의 결속을 강조하였다.“<sup>16)</sup>

11)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S. 75.

12)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S. 75.

13) 국가와 혁명과 나, S. 236.

14)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S. 75.

박대통령의 대답 “물론 한·일 관계가 빨리 정상화돼야지요. 우리 정부가 애쓰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독(獨)·불(佛) 관계와는 다릅니다. 당신들은 당당히 싸웠으니 사과하기도 시정하기도 쉽지요. 그러나 우린 대결도 전쟁도 없이 뒤통수만 얻어 맞았습니다. 잘살아 보자고 순진하게 손 내밀면 어느새 일본은 밑에서 권총을 들이댑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 감정이 좋을리 없는 겁니다.” 백영훈, 한강에 흐르는 라인강의 기적, S. 76. 이 대답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5) 봉정7만리. 박정희대통령방독기, p. 87;

16) 봉정7만리, S. 87.

#### 4) 서독의 경제 원조, 경제 협력, 한국의 산업화, 공동의 승공 통일

에르하르트 수상이 베퓌 오찬회동에서 박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경제원조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과거나 현재에도, 독일과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라는 탁류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적어도 이 두 개의 제방이 허물어 질 경우를 가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방의 일각만이 견고하다고 해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sup>17)</sup>

1964년 12월 9일 에르하르트 수상의 박대통령에 대한 연설: “우리는 모든 곳에 개발 원조를 준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와 같은 정신과 정치적 윤리적 신념을 가진 국민에게 기꺼이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원조를 하고 싶다. 서독과 남한 사이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당신의 국가재건을 위해 서독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 논의가 만족스럽게 진행되어 기쁘다.”<sup>18)</sup>

미국의 마샬플랜 (대 동유럽 Embargo 정책) 정책에서 나타난 봉쇄정책과 다자간자유무역정책의 목적 방법으로 상호 작용하는 상호관계가 서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실시됨. 서방세계사이에서의 다자간 자유무역 촉진, 이는 봉쇄정책에 이바지, 성공적인 봉쇄정책은 안정적인 서방세계의 다자간 자유무역 촉진 그리하여 경제성장. 이는 아테나워, 에르하르트, 박정희의 선 성장 후 통일 정책과 일치. 승공통일 정책의 내용.

서독의 지원과 한국의 산업화

라인강의 기적을 모델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 고속도로 건설, 자동차산업, 제철산업, 서독의 차관. 전문가 기술자를 한국으로 파견. 제 1차와 2차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큰 기여. 박정희의 독일 고속도로에 대한 집요한 관심. 독일 대기업들 방문.

서독에 광부 간호사 파견을 통해 인력수출과 외화획득 그리고 국제화의 의의를 알게 됨.

#### 5) 박정희시대 한독 관계에서 1967년 동백림사건의 의미

위의 한독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킨 사건.

민주화된 유럽통합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과거반성을 수행하는 서독과 남한의 군부정권의 비민주성과의 대조. 반공에 임하는 자세가 다름. 서독 남한 관계의 위기. 서독은 한국의 현실을 깨닫고 충격. 서독 남한 경제 관계 급격히 약화됨.

서독과 남한 사이에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 부각. 분단 현실이 그대로 공통점이 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 사례 2

#### 1969-1974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서독의 눈에 비친 한국의 남북관계와 남한·서독 관계의 진전<sup>19)</sup>

17) 봉정7만리, S. 89.

18) Bulletin der Bundesregierung, 11. Dezember 1964, S. 1682.

잘 알려진 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서독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동독과 그리고 동유럽의 국가들과 화해를 위해 소위 동방정책 (*Ostpolitik*)을 추진했다.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서독은 당시의 한국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이 당시의 한국의 남북관계를 연구하기에 필요한 기록들이 한국에는 잘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당시의 한국의 남북관계를 면밀히 주시한 주한 서독의 대사관이 Bonn의 외무부에 발송하여 외무부 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서독의 관심사에 대한 배경 그리고 서독·남한 관계의 진전<sup>20)</sup>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사항들을 인식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서독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동방정책과 유사한 남북화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동방정책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의 남·북관계가 해빙되면서 동아시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게 되면, 이는 유럽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그만큼 유리한 조건을 형성시켜 줄 것이었다. 한국과 동아시아 상황진전은 동·서독 관계에서 서독이 동독의 입장과 전략을 간파하고 동독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소련,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 국제정세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분단문제를 공동의 재원으로 한국과 교류를 증진한다는 것도 크게 득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의 남북관계 진전에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서독으로 하여금 비상한 관심을 끌게 하는 요인들이었다.

이러한 관계규명 작업은 추후 독일의 동서독 관계와 한국의 남북관계를 비교하는 연구작업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의 8·15 선언 배경에 대한 서독의 이해 및 평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소위 8·15 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을 서독대사관이 면밀히 추적하여 본국의 외무부에 보고하고 있었음을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서독의 관찰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전을 끝내기 위해 소련과 중국과 데탕트를 추구하고 이 가운

19) 이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 "West German Ostpolitik and Korean South North Relations", in: Bernd Schaefer (ed.), *Ostpolitik 1969-1974 and its World Respo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서독의 눈에 비친 한국의 남북관계 1969-1972", *국제지역연구* 2008년 1월호 참조.

20) 1969년에 한국에서는 국토통일원이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사안은 철저히 안보문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은 안보관련 당국에서 행하였다. 국토통일원은 다분히 학술적인 차원의 분단 현실과 통일정책에 대한 그리고 북한내부에 대한 연구와 논리 개발 그리고 정책적 자문에 업무의 역점을 두었다. 이 국토통일원은 자연스럽게 서독의 내독부 (Bundesministerium für die Innerdeutsche Beziehungen)와 되도록 많은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였다. 동·서독 간의 교류에 관한 주된 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 내독부는 이제 막 태생된 한국의 국토통일원에 좋은 상담역이 되어 줄 수 있었다. 서독 내독부의 입장에서 분단국의 교류에 대한 보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어서 국토통일원과의 교류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었다. 주한 서독 대사관은 국토 통일원 장관들의 면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본국으로 초청하여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다.

데서 한국의 현상유지를 위해 독일의 동방정책에 의거한 동서관계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70년 초반 한국에게 서독과 같은 남북 교류를 하도록 권유했다.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남·북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크게 주목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관심과 입장이 주한 서독대사관에 의해 면밀히 추적되었다.

예를 들어, 1970년 6월 11일 주한 미국 대사 Porter는 국무부에 보낸 전문 (Airgram)에서 독일의 방식처럼 한국에서도 남북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협상을 통한 재통일.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이 늘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바다. 한국정부가 북한에게 가족방문, 우편교환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남·북 사이에 직접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면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크게 완화시킬 것이며 교류를 확대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통일을 위한 직접협상을 시작하게 해 줄 것이다. ...독일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각각의 태도 변화는 긴장 관계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여러 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독일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뒤늦은 상태일망정 한국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박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평화적인 의도와 통일에 대한 바람과 그러나 직접협상을 제안하지 않는 형식의 성명을 발표하면 한국의 상황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긴장이 완화되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이다.”<sup>21)</sup>

주한 서독 대사관은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큰 관심을 가지고 관찰·분석하고 본국에 타전했다. 이에 관해서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수집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의 문건에 들어 있는 내용도 서독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의 뜻에 부응하듯 한국에서 1970년 8월 15일, 즉 25주기 광복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연설을 하였다. 즉, 그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적화통일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문제 해결을 위한 UN의 권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과 북 사이의 인위적인 장벽을 점차적으로 허물어 갈 것이라는 점을 공표했다. 이는 차후 박대통령의 8·15 선언으로 알려지게 된다.

서독 대사관은 외교·언론 채널 등을 통해 수집하는 여러 정보들에 근거하여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그리고 한국의 반응에 대해 예의 주시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독의 내독부와 한국의 국토통일원은 더욱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주한 서독 대사는 이에 대해 본국에 상세히 타전했다. 이 전문에서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에게 본격적으로 화해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했다.

주한 서독 대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실무회담이 가능하도록 국토통일원 차관 이규학을 본 (Bonn)으로 초청하여 깊은 논의를 가질 것을 본국에 권했다. 위의 박대통령 8·15선언 3일전인 8월 12일에 서독은 소련과 모스크바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서독과 남한 모두 양 국가 간의

21) NARA, Pol32-4 KOR. S., Box 2423. Airgram from the American Embassy , Seoul to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June 11, 1970.

경험과 정보에 대한 교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8·15 선언이 발표된 직후인 9월 초에 이규학이 서독을 방문했다. 국토통일원의 실무연구진은 이미 8월 15일에 서독에서 동서독 교류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벌였다.

런데 결국 북한은 위의 박대통령 8·15 선언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한이 1971년 8월 12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했을 때, 북한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 이틀 후인 8월 14일에 긍정적인 답을 보냈다. 이리하여 1972년 6월 16일 남·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주 의제로 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었다. 주한 서독 대사관은 이 적십자회담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여 본국 외무부에 보고했는데, 이는 동방정책의 방법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독 대사관이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적십자사가 북한에 제의를 한 시점이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과 일치하며 이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남북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었다. 서독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국제정치적 압력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고안해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동서독이 상호 주권 국가로서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그 주체가 동서독의 정부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당시의 국제정치적 도전에 대응하는 고도의 아이디어로 그리고 정책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주한 서독대사관은 당시 국토통일원 장관 김영선 (Kim Yong Sun)을 서독으로 초청하여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을 본국에 제안했다. 그동안 동·서독의 관계 경험은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진언이었다. 역으로 그들은 동·서독 관계 진전을 위해 한국의 상황으로부터 많은 것을 또한 배울 수 있으리라 내다보았다.

## 2) 7·4 공동성명에 대한 서독의 이해와 평가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소위 7·4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남·북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 주한 서독 대사관은 공동성명 전문을 본국에 송부하고 상세하고 다양한 평가와 함께 연일 심층 보고들을 올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주한 서독 대사관은 독일과 한국의 분단과정의 상이점, 그 구조의 상이점 그리고 공통점 등을 상세히 평가·서술하는 한편, 분단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서독과 한국 간의 교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수차례에 걸쳐 본국에 보냈다. 이 보고서들에 접할 때마다 서독 정부는 7·4 공동성명을 크게 환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위의 내용을 보고 서독대사관과 정부는 7·4 공동성명을 대하면서 한국의 통일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통일정책이란 UN 감시하에 자유 총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2년 2월 한국의 외무부 장관 김용식이 3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서독은 그것이 구두의 선전용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주목했다.<sup>22)</sup>

박대통령 8·15 선언, 김용식 외무부 장관의 3단계 통일방안 발표, 남·북 적십자 회담과 7·4 공동

22) 이 3단계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 1) 인도적인 접촉과 문제 해결
- 2) 비정치적 (무엇보다도 경제적) 접촉과 교류
- 3) 정치적 접촉과 문제 해결



성명을 대하면서 서독 정부는 동방정책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파악하고 대단히 큰 관심을 보였다. 주한 서독 대사관은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즉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표정의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반응들을 상세히 본국에 전했다.

한국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방법 (modus vivendi)이 서독의 동방정책의 것과 아주 유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독일의 경우와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히 '조국의 통일 (unification of Fatherlan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하나의 민족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고 있었다. 서독이 동독을 설득시키려 했던 측면이 이 점이었데 서독은 결국 '2개의 국가 인정'이라는 동독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은 동독을 대하는 서독에게 논리·명분상으로 커다란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독일은 4대 강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독려하는 가운데 독일문제, 특히 베를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와는 다르게 한국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또한 큰 차이점이었다. 이는 독일과 한국의 분단 상황의 차이점을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점들과 공통점들을 더욱 논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서독 외무부는 주한 서독대사관이 제안한 한국의 국토통일원 장관 김영선 (Kim Yong Sun)을 서독으로 초청하는 과정을 서둘러 진행시켰다.

서독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7·4 공동성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완화 정책을 위해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기여도였다. 세계 정치적으로 남·북대화의 시작과 제도화는 아시아에서 긴장완화의 길에 큰 진보를 이루게 하며 유럽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았다. 서독인들이 보기에 이는 서독이 일으킨 동방정책의 의지가 유럽에서 갖는 함의와 비견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동방정책의 추진목표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비로소 안보문제와 통일문제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도 크게 강조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해 8·15 광복절에 서독 수상 브란트 자신이 직접 이 7·4 공동성명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박대통령 앞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개월 후인 1972년 10월 남한의 유신헌법과 북한의 사회주의 강화법이 발표되고 각각 독재체제가 수립되고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는 7·4 공동성명이 이것을 위해 남과 북의 통치자들에 의해 이용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도록 했다.

앞에서 소개했듯 7·4 공동성명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던 서독정부는 매우 당혹해 했다. 동서독 간의 관계와 남북한 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시점이었다.

### 3) 6.23 선언에 대한 서독의 이해와 평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대통령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것과 공산권 국가들과의 국교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1969년 빌리 브란트가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의 수상이 된 후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1970년 서독과 소련 사이의 모스크바 조약을 통해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는데 서로 노력을 할 것을 합의 하였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서독과 동독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대통령의 6·23 선언은 독일에서의 동방정책 진행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국의 남북

관계진전을 주한 서독 대사관은 또한 면밀히 주시하여 본국에 송부하였다. 특히 6·23 선언에 대해 외국의 보도들에 대해 스크랩을 하여 송부한 것이 눈에 뜨인다. 예를 들어 *The Los Angeles Times*<sup>23)</sup> 는 6·23 선언을 한국이 서독의 동방정책의 모델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서독은 동방정책의 세계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7·4공동성명 후 유신체제의 등장에 대한 실망으로 위의 충격으로 인해 서독은 이러한 박대통령의 6·23 선언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했으며 큰 의미부여를 삼가했다.

### 사례 3

#### 유럽통합의 사상과 역사에 비추어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초국가주의<sup>24)</sup>

안중근의 활동과 저술 및 진술을 볼 때 그는 투철한 민족주의자이고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인지되어 그 모순적인 측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모순이 아닌 어떠한 새로운 일관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필자는 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정립되어 간 초국가주의 유럽통합 사상과 제 2차 세계대전 후 실현되어 가는 유럽통합사를 반추해 보면서 안중근이 이들보다 더욱 선구적으로 초국가주의 지역통합 사상으로서 동양평화론을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초국가주의 사상은 국가가 지역공동체에 주권을 양도하여 국가간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지역 공동의 번영을 꾀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순들이 더 이상 모순이 아니고 필연적인 논리적 연계 사항들이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나치의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 연방주의자들은 조국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독일과 싸웠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 목표는 나치 독일을 굴복시키고 독일의 양심세력과 함께 초국가주의 유럽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족주의는 끝없는 복수와 전쟁의 원인으로서 더 이상 프랑스 민족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민족을 위해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초민족주의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선구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독립과 인류 사회의 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 속에서 투쟁했던 선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도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유사한 관점을 그리고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고심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식체계와 가치관 그리고 실행방식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유럽통합론자들의 초국가주의 지역통합 사상을 비교하고 각각의 본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1910년 2월 14일 일본인 히라이시 우지히토(平石氏人) 여순(旅順) 고등법원 원장과 행한 면담에서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旅順을 개방한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균향으로 만들어 세 나라에서

23) *The Los Angeles Times*, June 24-26, 1973.

24) 이 사례연구로서는 필자의 줄고 “유럽통합의 사상과 역사에 비추어 본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세계사적 의의” 국제지역연구 2010년 1월호 참조.

대표를 파견해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 여순은 일단 청국에 돌려주고 그것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재정확보에 대해 말하자면 旅順에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한 명당 회비로 1원씩 모금하는 것이다. …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공용하는 화폐를 발행하면 신용이 생기므로 금융은 자연히 원만해 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 평화회의 지부를 두고 은행의 지점도 병설하면 일본의 금융은 원만해지고 재정은 완전해질 것이다. 旅順의 유지를 위해서 일본은 군함 5, 6척만 계류해 두면 된다. … 이상의 방법으로 동양의 평화는 지켜지나 일본을 노리는 열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지도록 지도한다. … 청과 한국 두나라는 일본의 지도아래 상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패권이라는 말부터 의미가 없어지고 滿鐵(만주철도) 문제로 파생되고 있는 분쟁같은 것은 꿈에도 나타날 수 없게 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印度, 泰國,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이 회의에 가맹하게 되어 일본은 싸움없이도 동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 日, 淸, 韓 세 나라의 황제가 로마교황을 만나 맹세하고 관을 쓴다면 세계는 이 소식에 놀랄 것이다. 오늘날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3분의 2는 천주교이다. 로마교황을 통해 세계 3분의 2의 민중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힘이 된다.”<sup>25)</sup>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양차대전 사이,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형성되기 시작한 연방주의 유럽통합사상과 그 이후 실질적인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런데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연방주의 유럽통합사상들 보다 30년 정도 먼저 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인들은 오랜 동안 민족주의 체제에 적응되어 왔던 까닭에 현대사에서 진행되어 오는 초국가주의 또는 초민족주의 유럽통합의 역사에 대해 일종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통합을 위한 구체적 주요 정책들이 1909년 이미 안중근이 제안한 동양평화론 속에 들어 있음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나치에 대한 저항운동에 헌신하면서 유럽통합의 전후 질서를 수립하고 자 했던 연방주의자 독일인 괴르델러(Carl Goerdeler)는 유럽통합안으로서 영구대표위원회(영구연방위원회)에 의한 통치,<sup>26)</sup> 통일된 법률, 관세동맹, 통합 운송제도, 공동화폐와 상호 예산통제, 강제중재(유럽 법원), 유럽방위군, 유럽경제이사회, 유럽연방의회를 제안했다.<sup>27)</sup> 그런데 괴르델러는 “유럽은 세계질서에 통합되어야 한다.”<sup>28)</sup> 고 했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가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 국가는 다만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조직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국제관계에서 도덕에 관한 이종의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정책

25) 「청취서」, 국가보훈처 편, 『21세기와 동양평화론』, 55-56쪽.

26) Carl Goerdeler: 'Practical Steps towards the Reorganization of Europe', early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40-441 쪽.

27)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p. 445-446; 노명환,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초국가주의와 민족·영토·역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독일 민족 경계의 축소를 전제로 한 유럽통합과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과정」, 문형진/김지영/권오중/노명환 편, 『다민족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4 (2008), 134-135 쪽.

28) Carl Goerdeler: 'Germany's future tasks' 1-8 August 1944, in: Walter Lipgens (ed.), *Documents on the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Vol. 1,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1985, 446 쪽.

은 다른 민족들의 이익과 서로 다른 자질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sup>29)</sup>

안중근은 위에서 보듯 일본이 점령한 旅順을 청에게 돌려주고 이를 공동의 군항으로 만들 것과 그곳에 삼국 대표를 파견하여 평화회의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 유럽인들이 알자스-로렌 지역을 두고 한 그러한 발상과 매우 유사하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알자스-로렌 지역은 민족적 갈등 지역이면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럽전쟁을 유발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통합유럽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여 제 2차 세계대전 후 이를 실현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여순항은 명대로부터 전략적 기지로 인식되어 동양최대의 부동항으로 개발되었다. 이곳에 군항이 건설되었다. 청조는 이곳에 중국 최대의 북양함대를 건조하였다. 이를 일본이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를 빼앗으며 다시 일본이 이를 점령하였다. 이처럼 여순항은 지속적으로 지역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분쟁을 유발하는 지역으로 존재해왔다. 안중근은 이 국제 분쟁지역을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안중근의 제안은 유럽인들이 30년 쯤 이후부터 유럽통합 사상과 실현과정을 통해 알자스-로렌 문제를 해결하려 한 방식과 참으로 유사하다.

안중근은 여순항에 설립한 이 상설회의의 지부를 각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평화회의를 점차 인도, 태국, 미얀마 등의 동양 제국이 다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켜 범 동양공동체를 창설하자는 것을 또한 제안하였다. 유럽통합 사상가들도 이러한 방식의 지부 설립을 제안하였고 유럽통합 운동 및 실현 과정에서 이러한 지부들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들 유럽통합주의자들도 점진적인 유럽공동체 창출을 생각하였다. 처음에 뜻을 함께 하는 국가들이 유럽공동체 (유럽연방) 를 시작하고 점차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앞장에서 언급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할 때 초창기 회원국들은 바로 이러한 뜻을 명시하였다. 유럽공동체는 처음에 6개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수차례의 회원국 확대 과정을 거쳐 현재 27개 회원국에 이르게 되었다.

안중근은 공동의 기금 조성을 주창했다. 이러한 공동기금 조성 정책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유럽통합의 역사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안중근의 이 제안은 얼마나 그가 지역공동체를 투철하게 구상했는지를 말해 준다고 하겠다. 유럽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유럽인들은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여 공동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다. 특히, 공동농업기금 그리고 공동지역기금 정책을 실시하여 공동으로 농업지역을 후원하고 상대적으로 미개발지역을 지원하여 유럽공동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유럽 공동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동기금 마련 정책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를 구상한 그리고 이를 실현한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안중근은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고 공동통화를 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회원국의 주요 지역에 공동은행 지점을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다. 이것은 서로간의 신용을 두텁게 하고 동양평화가 돈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을 구상함에 있어서 많은 유럽인들은 공동의 은행 설립과 공동의 화폐 창출을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현재 유럽연합은 프랑크푸르트에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고 유로 (Euro) 라는 단일통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초국가주의적 유럽통합에 얼마나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동의 은행과 단일통화 이것은 공동의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

29) 위의 글, 446 쪽. 이는 안중근의 사상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고 또한 역으로 효율적인 단일시장의 전제 조건 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중근의 공동은행 설립 및 공동통화 창출의 제안은 확실히 어떤 형태의 초국가주의적 지역공동체를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중근은 동양 삼국의 청년들로 편성된 공동 군대 창설을 주장했다. 1950년에 제안된 유럽 공동군대 개념은 유럽방위공동체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수립이라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는데 1954년에 실패하였다. 이때에 공동의 군대와 함께 이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정치공동체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를 또한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많은 찬성자들은 공동의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유럽연방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지름길이라고 했다. 지금은 서유럽연합 (WEU) 내에서 공동의 군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유럽통합사에서 유럽방위공동체 (EDC)와 유럽정치공동체 (EPC)의 실패는 최대의 위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당시 연방주의 유럽통합론자들은 유럽공동의 군대가 창설되고 이를 통제하는 정치공동체가 형성되면 연방주의 유럽이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이 실패는 이들에게 더없이 큰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만큼 공동의 군대 창설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설립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

안중근은 공동 군대의 구성원들은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어느 한 언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의 언어 및 공동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통합에서 모든 회원국 언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민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회원국의 모든 문화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유럽공동체 (현재 유럽연합) 내의 가장 큰 문제가 회원국의 모든 언어를 사용하고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주적 통합을 상징하면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목표를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정책영역으로 되어 있다. 2개의 회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공동의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한다. 유럽공동체에서 공동의 교육정책은 유럽 공동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유럽 각국의 정체성을 넘어 유럽 공동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그 바탕 위에서 유럽시민사회 실현을 꾀하는 것이다. 안중근은 공동의 군대에 편성된 청년들이 2개 이상의 어학을 배우는 동안 우방 또는 형제의 관념이 높아져 그만큼 더 우의를 다지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유럽통합론자들이 공동의 언어 및 문화정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했는데 유럽통합사에서 실현해 온 것과 일맥상통한 논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중근의 구체적 제안들은 초국가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추구한 결과들이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는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본이 여순항 유지비 축소 등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기금 정책을 통해 재정확충을 할 수 있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 유럽통합에서 공동의 정책이 개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각 회원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안중근은 일본의 지도아래 한국과 중국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경제공동체 창설과 운영방식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는 안중근이 평등한 회원국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내에서 일본의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지 추호도 제국주의적 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안중근의 구상은 일본 맹주론을 수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유럽통합의 초기 과정에서도 프랑스와

서독의 정치·경제적 지도력이 인정되었다. 이 두 국가는 유럽통합을 위한 두 기관차로 불렸다.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럽지역통합을 세계통합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았다. 세계통합은 초국가주의 세계정부에 기초한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안중근이 그가 인지한 ‘세계보편’ 교회인 가톨릭교황으로부터 동양 삼국의 황제들이 대관을 받는 것을 상정한 것은 동양평화를 넘어서는 세계보편성의 추구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세계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 자신의 인지 속에 있는 가톨릭으로 정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종교관과 세계관의 조우라고 볼 수 있겠다.

#### IV. 맺음말